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준비·지역 10개 거점대학 육성”

지역 균형발전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한 혁신도시 시즌 2를 비롯해 지역 10개 거점대학 육성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제시한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란 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민생 회복과 국민 안전, 지역 균형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일부 대기업 집중 등이 성장·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면서 “수도권 1억 체제를 극

수도권 집중 성장·발전 가로막아... 지방 배려 넘어 우선 정책 지역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 투자

복합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이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며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나 예산 배분 과정에도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인구소멸지역, 수도권에서 거리 등)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지방교부세나 SOC 사업 등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기후에너지부 등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이 대통령은 “부산 상항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며 “충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하고, 남방한계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 호남과 영남 이런 데보다는 좀 낫다”고 말했다는 점에서다.

후보 시절 내는 정책 공약에서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을 수립해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정주·교육·문화 인프라를 함께 묶어 정부 지원을 진행할 것을 약속한 것도 한 이유다.

공공기관 이전 도시 내 연구·개발(R&D) 캠퍼스 유치, 규제 특구와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간 공동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지역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후보 시절 공약에 포함됐고, 광주 집중육성에서도 호남 지역에 지역 거점대학 조성을 약속한 사안이다.

지역에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개교 이상을 진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고, 각 지역을 직접 다니며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맞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지가 최근의 논쟁거리 같다.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일리는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신도시에 조성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북정책·한일관계·검찰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치·외교·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기조를 밝혔다.

대북관계와 한일관계 뿐 아니라 미국 관세정책 등의 외교사안 뿐 아니라 의정갈등 봉합과 검찰 개혁,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보인 것이다.

△대북정책 소통중요 =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소통, 협력이 정말로 중요하다. 미워도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을 통해 서로의 손해를 줄이고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 전면 단절은 바보짓... “독도는 우리 영토” 검찰개혁은 자업자득...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견 없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헌법에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있다”면서 “흡수가 아니다.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냐.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수반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 가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기조를 따라 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투트랙으로 = 이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예를 들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협력할 게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일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서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일본도 괴롭지 않겠느냐,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도 괴롭음의 일부”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없고 논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협력과 과거사 갈등)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고, 오른쪽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와 협력문제를 따로 봐야 한다는 일명 ‘투 트랙’ 전략을 보인 것이다.

그는 “사실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 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며 “애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미국 관세 협상은 시간이 필요 = 8일 한미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전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이른바 ‘상호 관세’ 유예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8일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에 관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확언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답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 쌍방이 정확하게 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다방면에서 우리의 (미국에 제시할) 주제(의제)를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의정갈등 봉합은 신뢰회복으로 =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국가적 현안 중 제일 자신없었던 분야”라면서 “여러 상황들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

켰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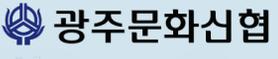
그는 “(이번 사태는) 불신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나가기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속도는 국회의 의지 =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면서 “검찰개혁 시기는 국회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으로 (검찰 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